국외출장 결과보고서

1 출장 개요

□ 출장목적

○ 보편적 기본서비스 및 영국 낙후지역 활성화 사례를 통한 기본사회 기반 양극화 해소 방안 검토
○ 영국 금융정책 논의 및 자산형성지원제도·금융기본권 평가
○ 영국 취약청년 지원 NGO의 역할과 사회 재진입 사례관리 현안 파악
○ 한국 및 영국 교육불평등 및 사교육·재교육 현황 비교를 통한 재도전 교육정책 방향 모색

□ 과제명

o [수탁25-119-00] 경제·사회 양극화 주요인 분석과 정책대응 방향 연구

□ 출장기간

o 2026.10.05.(월) ~ 2026.10.11.(일)

□ 출장국가(도시)

o 영국(런던)

□ 출장자

o 이주미 부연구위원, 최준영 전문연구원

□ 일정요약

일자	국가(도시)	방문기관	면담자	주요 활동상황
2026.10.05.(월)				○ 출국
2026.10.06.(화)	영국 런던	Local Trust	John Fox(부대표), Megan Falck (프로그램 매니저)	○ LT 기관 개요 ○ Big Local 사업 진행성과 ○ 영국 낙후지역 지역사회활성화 방안
2026.10.07.(수)	영국 런던	LSE NEF	Ian Gough(교수) 백진경(KCL) Anna Coote(교수)	○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본사회 정책 방향 검토 ○ 보편적 기본서비스 정책 논의 ○ 기본사회 구현을 통한 양극화 해소 방안
2026.10.08.(목)	영국 런던	Foyer	Siobhan, Arlene 외 5인, MinJi Cha(KCL)	○ 영국 취약청년 대상 NGO 역할과 기능 ○ 취약청년의 사회 재도전과 진입을 위한 사례관리 현안 파악
2026.10.09.(금)	영국 런던	Open Univ.	Rajiv Prabhakar	○ 영국 금융시장 및 금융정책 논의 ○ 자산형성지원제도에 대한 평가 ○ 금융기본권 관련 논의
		LSE	Sonia Exley	○ 한국 교육불평등 현실에 대한 평가 ○ 영국 사교육 및 재교육 관련 현황 ○ 재도전을 위한 교육정책 방향
2026.10.10.(토) 2026.10.11.(일)				○ 귀국

2 출장 주요내용

①	영국 Local Trust 운영 개요 및 지역활성화 성과 관련 회의
일 시	10월 6일 (화) 14:30
장 소	영국 런던 (Local Trust 사무실)
참석자	John Fox(부대표), Megan Falck (프로그램 매니저) 이주미, 최준영(KIHASA)

□ Local Trust 소개

○ Local Trust의 대표사업 Big Local은 잉글랜드 150개 지역에 영국의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장기간 공동예산을 부여하고 주민이 사용처를 결정하도록 한 사업을 관리하는 기구임

- Local Trust(이하 LT)는 주민이 우선하는 생활문제, 현금의 활용을 뒷받침하는 지역서비스, 공동체 변화에 필요한 시간을 모니터링 중
- LT는 독립적으로 150지역에서 각 지역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 중에 있음. 펀딩은 지역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용 중. 개개인보다는 지역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펀딩을 제공하고 있음

○ Community Needs Index(CNI)는 소득빈곤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회적 기반의 부족을 지역 단위로 측정함. 서비스 접근성은 연결성 영역의 일부이며, 공간·시설, 참여·조직 역량과 함께 보여줌.

□ Big Local 사업 개요 및 한국에 주는 시사점

○ Big Local 사업 개요

- Local Trust의 장기·유연한 자금지원과 실무지원은 주민이 계획을 수정하고 갈등을 해결할 시간을 보장하려는 설계임. 사업성과는 시설 수나 지출액뿐 아니라 주민이 자원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남았는지를 포함함
- 통상 3년 단위인 정부 사업 주기와 달리, 기금(endowment) 방식으로 장기간 재원을 보장하여 지역이 서둘러 결정하지 않고 장기적 우선순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 단기 정부지원이 지속적 효과 없이 사라지는 이른바 '치고 빠지기(hit and run)' 효과를 피하고, 정치 주기 변화로부터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상당 규모의 자금을 사전에 일괄 약정함
- LT는 £100만으로 한 지역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으나, 지속적인 사회적 변화의 계기는 마련할 수 있다고 봄

항목	확인 내용
기관	2012년 설립된 지역 기반 지원기관. National Lottery Community Fund 재원으로 Big Local 운영
대상·기간	잉글랜드 150개 지역. 지역별 10~15년의 장기 지원, 전체 사업은 2011~2026년
재원	지역별 최초 £100만, 투자수익을 활용한 £15만 추가 배정. 중앙의 총기금과 지역별 배정액은 구별
의사결정	주민 파트너십이 우선순위와 계획 결정. Locally Trusted Organisation이 자금관리·회계 등을 지원
목표	주민의 욕구 파악·대응 역량, 기술·자신감, 우선문제 해결, 더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인식

□ CNI의 서비스 접근성 구성

상위 영역	주요 내용
공동체 자산	모임·문화·여가·녹지 등 주민이 활용하는 공간과 시설
연결성	필수서비스 이동시간, 교통·디지털 접근, 고립 등
활동적이고 참여하는 공동체	시민 참여, 지역조직 및 공동체 결속 등

□ 양극화 개선에 주는 시사점

○ LT의 시범사업 지역은 물리적으로 고립된 지역으로 서비스와 고용에 대한 접근성이 한계. 이를 개선하고자 사업 수행. LT사업의 일부 지역은 과거 광업지역(또는 어업지역)이었으며, 산업이 소멸되며 고립되고 지역적으로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임.

- 150개 지역은 낮은 사회자본을 가진 지역이었으며 지역활동 조직도 없었던 지역이었음. 많은 지역을 LT가 지원했지만 이 중 150개 지역만이 오랜 기간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었음
- 도시·농촌 간 차이도 뚜렷함. 농촌·해안 지역은 교통 연결성이 낮아, 인근 도시의 필수서비스를 고립된 지역으로 끌어오는 위탁(commissioning)에 자금을 주로 활용함. 반면 런던·맨체스터 등 도시 지역은 인구 이동이 잦고 주거가 불안정하여 주민의 장기 참여가 어려웠으며, 여러 시민사회 단체 간 자금 확보 경쟁이 나타남
- *(함의) 양극화를 개인 간 소득격차뿐 아니라 지역 단위의 사회적 기반 격차로 확장하여 볼 필요. 또한 지역 유형별로 접근을 달리해야 함. 인구감소·쇠퇴 산업지역은 이동지원, 인근 거점 서비스 위탁 등 고립 완화가 우선이며, 도시 취약지역은 높은 인구 이동과 주거 불안정을 고려한 참여 설계와 지역 단체 간 자원 경쟁을 조정하는 협력 구조가 필요함*

○ 장기·안정적 재원 설계

- Big Local은 집행 전 약 5년의 준비기간을 두고 지역별 10~15년을 보장함. 3년 내외의 사업 주기로는 주민 역량 형성과 합의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움
- *(함의) 기금형 재원이나 다년도 일괄 약정으로 사업을 정치 주기와 분리하고, 장기 근린투자의 가치에 대한 합의를 형성하는 방안을 검토 필요*

○ 지역 조직 구성 방안

- 초기 중간지원 조직도 있었지만, 일관되게 운영된 조직을 찾기가 어려웠음. 예를 들어, 일부지역에서는 뱅크조직이 기금을 관리하기 시작했으며, 여기에는 주민, 자선단체, 학교 조직 등이 참여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주민이 선발해서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학교, GP 진료소 등이 '은행' 역할을 하는 지역 신뢰기관(LTO)으로 선정된 사례 있음)
- 자금 집행 전 약 5년간 가가호호 방문 등 직접적인 주민 접촉에 공을 들여 지역 역량을 키우고 참여자를 모집함. 다양한 주민 간 자금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 형성이 주요 과제였음
-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지방정부가 담당함. 하지만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음. LT가 참여하에 자발적으로 운영하게 됨. 정부 특히 지방정부 개입이 없이 진행. 지역에 따라 공무원의 반발도 없지

않았음.

- Bank로서 역할한 기관은 예산의 5%를 가져가서 행정적 지원을 수행함. 현재는 사업이 확대되며 더 많은 예산을 가지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프로그램 종료 후 지속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음. 예산이 시설 등에 투자했을 때 이측면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 하지만 새로운 펀딩을 만드는데는 기여했을 것으로 인식

○ LT사업의 성과를 표현하면 6가지 주제가 거론됨. 공동체 함께하는 공간 만들기, 건강개선, 지역 위기 대응 방안,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청년 및 자부심 상승 등에 관심.

- 지역 프로그램은 현재는 종료. 현재는 참여지역의 주민들이 어떻게 스스로 지역을 개발하고 있는지 평가 준비 중

○ LT에서 보는 지역활성화 및 격차 해소란 특정 정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지역 주민의 자신감, 연대감이 생기는지, 미래에 대한 대비, 참여도 등 인지적 측면을 평가함.

- 경제적 활성화의 경우 지역단체 차원에서 citizen advice가 개입하여 개개인의 자금 활용 등에 대해 교육 등을 시행. LT가 보기에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하고 있음

○ 프로그램 성과 중 하나인 공간이 주는 의미는 중요함. 실제 예산 사용이 적고 성과가 낮은 지역은 공간이 없었던 지역이었음. 공간을 통해 인지, 연대감 등이 형성된다는 점 인식함. 정부정책이 빈곤층 등을 타겟팅 하고 있지만 LT는 빈곤층 이외 다른 계층에 집중하고 양극화 등을 해소를 주장함

○ CNI 는 사회불평등 뿐 아니라 인프라 까지도 포함한 지수로 LT의 전문가 그룹이 제안한 지수임.

- 통계적 의미보다는 지역적, 정서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의미 있음. 정부와 협업하면서 다른 지역으로도 지수를 확대하고자 함. 지수는 기존 사회경제적 매트리스와 LT가 더하고자 하는 물리적, 기관 간 네트워크, 주민 간 연결성을 포함해 지수를 만들어 냄

②	**한국의 기본사회 정책과 양극화 관련 평가**
일 시	10월 7일 (수) 12:00
장 소	LSE Office
참석자	Ian Gough(교수), Anna Coote(교수), 백진경(KCL) 이주미, 최준영(KIHASA)

□ 현물 서비스의 소득 양극화 완화 효과

○ 현금성 급여와 서비스(교육, 건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을 함께 지원해야 함. 소득의 수준과 서비스의 질·범위가 연계되어 작동해야 하며, 현금 지원은 서비스 제공과 함께 가야 함.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질에 따라 품위 있는 삶에 필요한 현금소득 수준이 달라지므로,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소득보장과 함께 설계해야 함

- 보편적 기본서비스(UBS)는 기본소득(UBI)에서 출발해 확장된 개념으로, 사람의 필요 충족 요건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함

○ 서비스는 양극화 완화 효과가 크게 나타남. OECD 자료로 보면 현물 공공서비스의 가치는 최하위 5분위 세후소득의 약 76%, 최상위 5분위 세후소득의 약 14%에 해당하며, 공공서비스는 소득불평등을 평균 약 20% 줄임

- 현금은 용도가 정해지지 않아 필요 충족을 보장하지 못하며, 의미 있는 수준의 기본소득은 기본서비스보다 훨씬 많은 재원이 듦(Gough, 2020)
- 예를 들어, 영국에서 2~4세 자녀 1명을 둔 한부모 가구가 무상보육을 받으면 가처분소득이 연간 약 7,500파운드 늘어나는 효과가 있음(Coote, 2023). 서비스(현물, "가상 소득")와 최저소득보장(현금)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임금(social wage)"으로 보완 관계에 있음(Coote, 2021)

□ 서비스 접근 격차 해소를 위한 권리 보장

○ 사람의 권리가 어떻게 강조되느냐가 중요함. UBS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정보, 절차에 대한 접근,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Anna)

- 다만 복지를 엄격하게 강제 가능한 법적 권리로 규정하면 소송이 끊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절차적 권리와 수급 자격에 대한 명확한 의지 표명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Anna). 시민이 자신의 수급 자격과 신청 방법을 알 수 있도록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임
- 이를 위한 원칙으로 동등한 접근성, 결정 권한(조절), 지속성, 규제, 프리빌리지의 5가지를 제시함. 그 5대 원칙은 ① 특혜(privilege)가 아닌 권리로서의 수급 자격, ② 생태적 지속가능성, ③ 의사결정 권한의 분권화, ④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공정한 보수, ⑤ 공급주체의 혼합경제임. 이와 함께 접근의 평등과,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가 충족되는 방식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됨
- 독일 법을 기준으로 보면 연금이나 소득이 평균적 소득 수준과 일치해야 한다고 봄. 독일 헌법이 연금생활자 소득을 다루는 방식처럼, 구체적인 법적 청구권을 만들기보다 일반적인 의지 표명 형태로 규정하는 방안을 참고할 수 있음(Ian)

○ 국가가 모든 서비스를 직접 공급할 필요는 없으나, ① 재원 징수·배분, ② 품질 기준 설정·집행, ③ 접근의 형평 보장은 국가의 핵심 책임임. 명확한 자격·수급 규칙이 필요하며, 영국에서도 서비스에 대한 사회권은 법적으로 더 발전되어야 함(Coote 외, 2019). 수급권은 강제할 수 있어야 하며(enforceable), "기본"은 최소가 아닌 충분한 수준을 뜻함(Coote·Percy, 2020)

□ 양극화 대응 기준선(최저·적정 수준)의 사회적 합의

○ 최저주거기준처럼 수준 설정은 전문가와 정부의 논의를 통해 이루어짐(Ian). 영국 주거 분야의 "침실 기준(bedroom standard)"도 공무원과 학자들이 마련한 기준의 예임(Ian). 국가적 대화를 이끌어내는 접근이 중요하며, 시민이 주도하는 대화 창구가 필요함(Anna). 장기적으로는 시민과 전문가의 합의 과정이 필요함

- 예컨대, 아일랜드의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를 참고할 수 있음. 특정 집단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이를 활성화해야 함(Ian). 시민의회는 보건의료·교통·주거 등 분야별로 무

엇이 적정한 삶의 질인지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숙의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임(Anna)

- 기본서비스 구성 원리 가운데 핵심은 민주적 결정임. 또한 상호작용,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을 막는 것, 사람들이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음(Anna)

○ (참고) Doyal·Gough(1991)의 "이중 전략(dual strategy)"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음. 필요를 충족하는 수단은 전문가의 체계화된 지식과 당사자의 경험적 지식을 민주적 대화로 결합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

- 기본필요 충족에 대한 사회권과 집합적 책임은 형평·효율·연대·지속가능성의 네 가치로 정당화될 수 있음(Gough, 2019).

□ 주택 중심의 자산 양극화와 대응 방향

○ 한국은 소득 불평등이 안정되는 추세일 수 있으나, 부동산과 금융자산 격차로 자산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으며 자산 측면에서 중산층이 축소되고 있음. 영국은 주택가격이 매우 높으며, 한 자산가가 많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도록 해야 함. 자산형성 지원은 재정이 너무 많이 소요되므로, 부동산 자산은 세금으로 규제가 필요. 구체적으로 과도한 자산 축적을 억제하고 사회적 조치의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부동산 과세와 토지가치세(land value tax)가 거론됨(Anna)

- 토지와 주택의 금융화가 문제의 핵심이며, 영화 〈기생충〉이 보여준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음(Ian)
- 영국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적은 계약금(deposit)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정부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결국 세금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 직접적인 현금이전보다 계약금 요건 완화로 주택 소유를 쉽게 하는 방향이 논의됨
- 한국은 청년 대상 금융교육으로 저축과 주식 등 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해 자산 격차 완화를 시도하고 있음. 한편 출생 시 기초 금융자산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에 비효율적인 방식이라는 의견이 제시됨(Ian)

○ Coote는 주택을 불평등의 주요 동인으로 보고, 공공의 토지 취득과 임대료 상한 등 주거비 통제를 대응 수단으로 제시함(Coote, 2023)

- 주거 보장은 무상 주택 공급이 아니라 모두에게 적정하고 쾌적한 주거를 보장하는 것이며, 덴마크 주택협동조합을 사례로 듦(Coote·Percy, 2020)

□ 최저선과 상한을 함께 보는 양극화 대응의 필요성

○ 영국에서는 주택 보유에 따른 부와 금융자산에 따른 부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 지난 5년간 석유·에너지·식품 등의 인플레이션이 저소득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에 따라 영국에서는 부문별(섹터별)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즉, 비용 주도 인플레이션에는 일반적인 현금이전보다 부문별 접근이 더 적합함(Ian)

- 예컨대, 소비량 기준선을 정하고 이를 넘는 사용분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 에너지의 경우 기본 사용량을 저가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블록 요금제(구간별 요금제)를 적용하면 복잡한 소득조사 없이도 지원이 가능함(Anna). 양극화 대응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필요(needs)를 충족하는 방향이어야 함

○ Gough는 모든 사람의 소비가 기본 필요를 충족하는 최저선(floor)과, 다른 사람과 미래 세대의 필요 충족을 침해하지 않는 상한(ceiling) 사이에 있어야 한다는 개념(Di Giulio·Fuchs, 2014)에 대해 인간 필요 이론을 바탕으로 개념을 구체화하여 하위의 결핍과 상위의 과잉을 함께 다루는 틀로 불평등에 접근함

- 최저선은 객관적·보편적 인간 필요로 정의하고, 상한을 넘는 소비는 모두에게 보편화될 수 없는 사치로 구분함. 최저선과 상한은 전문가와 시민의 대화적 민주주의를 통해 설정해야 한다고 봄(Gough, 2020; 2023). Coote도 사회적 최저선, 생태적 상한, 그 사이의 형평을 Social Guarantee의 원칙으로 제시함(Coote, 2023)
- (참고) 소비량 기준 지원 방식은 NEF가 제안한 "국가에너지보장(National Energy Guarantee)"과 같은 구조로 볼 수 있음. 모든 가구에 필수 에너지량을 무상·저가로 제공하고, 초과 사용분에는 누진 요금을, 최고 사용층에는 할증 요금을 적용해 교차보조하는 방식임
  - NEF는 정부 보조금 약 80억 파운드를 전제로, 2024년 4월 기준 전체 가구의 약 88%, 소득 1분위 가구의 약 94%가 요금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NEF, 2023). 이는 소비량에 따라 최저선은 보장하고 상한 이상의 소비에는 부담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소비 회랑 개념을 정책에 적용한 예로 볼 수 있음

③	Foyer 취약청년 대상 지원사업 현황 파악
일 시	10월 8일 (목) 11:00
장 소	Foyer London office
참석자	Siobhan Cunningham(The Foyer Federation), Arlene Walker, Anniesah Sweeney, Vanessa Garwood 외 청년 3인(Enfield Foyer), Minji Cha(KCL) 이주미, 최준영(KIHASA)

□ Foyer 기본 현황

○ 포이어 연합 네트워크는 전체 52개 연합이 함께하고 있으며, 각각의 빌딩에서 서비스를 제공중. 건물 소유는 포이어 자체 소유가 아니라 자선단체, 특정기관 등 민간 단체가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52개는 포이어 연합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이며, 이외에 별도 기관 등이 존재하고 있음. 이것이 과거 120여개로 본 것 같음

○ 포이어 본사는 시설 운영에 있어서의 질적 향상(주거의 질 향상), 청년 문제 해소(시설 운영상 문제점 및 난제 해결), 서비스 총량 증가 등의 세가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보조하고 지원함(네트워크 회원기관의 서비스 질과 회복력(resilience) 제고에 역할을 둠)

○ 각 단체가 자체 운영하면서 거주자의 연령을 다양하게 결정하고 있음. 기본적으로는 영국에서 정한 청년 연령에 준해서 설정하며, 보통 16-25세를 청년으로 보고 있어 지원 청년 연령은 이 범위내에 대부분 해당. 포이어는 10년 전과 동일한 목적하에 운영하고 있음(슬라이드 참조). 포이어는 주거(home)에 학습 및 일자리 지원을 결합하여 제공함

- 서비스를 받고 있는 청년은 스스로 찾아오거나 또는 아웃리치, 지역단체 등을 통해 연계되고 있음. 16

세 이하는 HMO에서 지원받다가 찾아오기도 함. 이외 병원이나 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청년 등을 발굴하고 있음. 전국적으로 포이어 본사가 리크루트 해서 지역 포이어에 보내기도 함

□ Foyer 관련 현황과 한국에의 시사점

○ 포이어에서도 청년층의 시대적 변화를 인지하고 있음. 영국내에서 청년 노숙자 등이 증가 중. 기관 내 비호(망명) 신청자 비율이 2021년 7%에서 18%로 증가함. 이중 1/3이 정서적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지원 수요에 비해 이를 돕는 스태프가부족한 어려움에 직면 (청년 입소자의 정신건강 문제가 커지고 있음)

○ 금전적 지원 관련해서 보면 포이어가 별도 제공하고 있지는 않음(생활비 지원은 유니버설 크레딧, 주거급여 등 외부 복지급여를 통해 이루어짐). 대신 기술(=능력, 역량)을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영국 복지제도인 유니버셜 크레트에의 접근성 지원, 영국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제도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UC를 신청하지 않은 청년들의 신청을 도와 UC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거주자 중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하드쉽 펀드를 운영 중. 소비방법 교육과 직업 구직 과정의 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는 예산으로 활용 (식비 등 긴급 상황이나 특정 교육훈련 비용도 충당. 식료품 구매 등 1차적인 소비뿐만 아니라 교육비도 지원할 수 있는 별도 예산임)

○ 내부 워크숍 운영(매주 목요일 미팅) 중이며, 여기서는 예산활용 방안, 거주환경 활용, 건강한 활동 방식 등 국가에서 주는 복지제공 서비스에의 접근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려주고 있음 (개인위생, 정신적 웰빙 관리 등 자립생활 기술도 다룸)

- 청년이 스스로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원 중. 여기서 가치라는 의미는 자신의 능력을 알고 새로운 직업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지도 하는 것을 말함

○ 고용과 관련하여 구직서비스를 제공 중임. 레노바라는 시민단체와 파트너 관계를 통해 청년 구직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중 (필요한 스킬을 배우고 이력서 작성 등을 가르치는 세션 운영) (이외 Maximus, Connect to Work 등 고용지원 기관과 협력하여 이력서 작성, 면접 기술, 구직 활동을 지원)

- 유니버셜 크레딧도 관련 단체와 협업하여 청년층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 또한 자영업 등에 대해 관심 있는 청년을 위해 전문가(파트너쉽 기관에서 파견. 참가하는 전문가도 일자리 형태로 참여하고 있음)를 초청해서 기술 습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 중 (지역 기업과 협력한 트레이딩 세션, Deussen's Partnership Solutions를 통한 건설 워크숍 등)

○ 청년 자립 과정에서 평가를 하고 있음. 세가지를 평가하고 있음, 첫째, 스스로 월세 낼 수 있는지, 둘째, 생계를 위한 기본 지출을 부담할 수 있는지, 셋째, 일자리를 가지고 있으며, 거주 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지 평가(주택 수리 등 가사 처리 능력 포함) 세 가지 모두 부합되면 자립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기관을 떠나게 됨

- 기관을 벗어나면 청년은 세가지 형태로 이동함, 시에서 운영하는 카운셀하우스에 지원하거나, 자신이 직접 주거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정부운영 지원 주택 등으로 이동하고 있음(지원 욕구가 지속될 경우 추가 지원주택으로 이동).

- 새롭게 18개월 전(최근) 도입된 제도는 시설을 벗어났지만 부적응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이때는 구직부터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지원하고 있음(예: 가스·전기 등 공과금 개설). 사례관리는 별도 비용(pay)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의 형태로 지원되고 있음
  - 지난 시기 재지원이 없다는 것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지만, 최근 도입된 제도를 통해 재입주도 가능함. 하지만 재입주시 조건은 있음. 자립이후 평가에서 부정적인 경우에는 재입주가 어려움 (구체적으로 ① 임대료 체납이 없어야 하고, ② 참여 부진으로 퇴거된 이력이 없어야 함)
  - 포이어를 독립하기 위한 준비 측면에서 엔필드의 사례는 순기능을 하고 있는 구조임

○ 포이어 본사에서는 자립 청년을 관찰한 결과, 자립 이후 40%는 지원시설에 머무는 것을 확인, 단지 5%만이 개인 소유 주거로 이동함. 이는 청년이 독립한 이후 주거에 있어 임대인이 요구하는 보증금, 두 달 치 월세 선납 등을 준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보증금 부담으로 결국 사회주택으로 이동하는 것이 관찰되며, 런던의 경우 사회주택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음.

- 이외 청년의 자립을 위한 교육 중이며, 주로 조세 납부 방식, 벌어들인 소득을 활용하는 방식 등을 배우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함(세금 납부, 책임감 있는 예산 관리 및 주거 관리 역할). 예산활용에 대한 욕구가 높았음. 청년들은 예산 활용 기술이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거주 주택에서 발생하는 거주세(council tax), 전기료, 가스료 등 납부에 대해 배우며 삶과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게 됨. 이것이 시설로 돌아오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
- 사례, 저(청년여성)는 정치와 자원봉사에 관심을 둔 바 있음. 작년에 아동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정부가 청년의 노숙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알고, 청년 노숙 관련 의제를 정부에 건의하는 활동에 직접 참여하면 의회와 정당활동 등으로 확대하였음. 현재는 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음
- 사례(남성), 리버플의 금융권 지역에서 오신 자원봉사를 통해 금융시장을 경험하게 되었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은 바 있음.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기술 트레이닝을 배울 예정임(외부 산업계 연계를 통해 트레이딩, 그래픽 디자인 등 전문 기술을 배운 경험 공유)

○ 내부적으로도 고용기회를 제공하는데, 예를 들어 다른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지원단체의 다른 부서에서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른 구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음 (소속 주택협회 내 IT, 시설관리, 고객서비스 부서 등). 거주자였다가 엔필드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으며, 다른 부서로 이동하며 기술을 배울 수 있음.

- 기업과 연계해서 기술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중(기업 연계 기술 교육 확대 노력), 포이어는 영엔터테인먼트제도의 지원을 통해 고용뿐 아니라 창업을 할 수 있는 기술도 지원하고 있음
- 사례(남성), 2년전 노숙경험한 바가 있음. 차드라는 기관에서 자원봉사 중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며 이후, 다른 청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됨. 포이어와 만나며 새로운 경험을 축적해 가고 있음. 포이어가 청년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음. 또한 노동시장 참여의 어려움 속에서 구직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얻음. 예를 들어 건설업 훈련에 참여하며 건설업의 특성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음

○ 영국에서도 정부가 훈련을 제공하지만, 정부 프로그램은 청년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음. 청년 개

인의 관심사가 다양하고 서로 인식이 다른데 정부는 이와 같은 욕구를 제공하고 있지 못함. 포이어와 같은 세심한 관리와 지원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함

- 포이어는 커뮤니티를 잘 알고 있고, 파트너쉽과의 관계 속에서 기술과 고용을 연계하면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음. 정부는 양적 평가에 관심을 두지만 포이어는 좀 더 좋은 고용형태로 나아 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고 봄
- 사례(여성), 오픈대학을 통해 법을 공부 중. 학생의 학습 역량이 부족할 경우 추가적인 교육지원을 통해 부족한 학생이 따라갈 수 있도록 지원

○ 포이어가 파악해 보면 전국적으로 34.4%가 재교육 현장으로 돌아가고 있음. 다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음. 영국 정부의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연계하기도 함. 포이어도 자원단체와 연계해 학생이 학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대학 학비를 위한 Battle Trust 보조금, 학업용 노트북 지원 등)

- 대학이 아니더라도 특정 과목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함. EET 예산으로는 학생교육 과정에 도움을 주고 있음. 사례로 풀타임 학생이면서 일을 하고 있는 청년에 대해 포이어에서 거주를 지원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포이어가 대학과 파트너 쉽을 하고, 희망하는 학생의 교육, 학비, 기자재 등을 지원하고 있기도 함 (Deloitte, Vodafone 등 기업 파트너를 통해 노트북, SIM 카드 등 제공)

○ CTF도 운영과정에서 미수령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저소득 가정이 대부분임. CTF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가족의 도움 없이는 저소득 청년이 이를 활용하기 어려움). 엔필드에서 운영한 워크숍에서 관련 제도를 설명하고 이후에 CTF를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짐

- 마틴 루이스라는 분이 CTF를 알리는 선전활동을 하고 있음. 20세 이전에 신청하지 않으면 CTF 자격이 사라지므로 이를 알리는 활동을 중요하게 수행하고 있음
- 포이어는 별도로 알리는 작업을 하지는 않지만, 다른 단체를 통해 지원하고 있음. 결국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지하는 것 밖에 없을 것 같음
- 한국 정부는 저소득 청년·가구가 주거 보증금이나 창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사한 자산형성 제도를 검토 중임을 설명함
- 참석자들은 지역사회의 효과적인 중개나 제도 접근 방법에 대한 안내 없이 자금만 제공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함

○ 포이어와 협업 기관은 전국에 분포하고 있으며, 산업이 낙후된 지역도 있음. 농어촌지역의 경우 거주지역도 넓게 분산되어 있음 (농촌 포이어는 중앙 건물 대신 지역 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하는 분산형 모델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

- 대안으로 온라인 러닝, 재택 교육 등의 방식도 제안하고 있음. 도시의 문제가 거주청년의 자립이라면 (도시는 높은 임대료와 사회주택 부족으로 자립 이행이 어려움), 농촌지역은 다른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현지 기업이 부족해서 고용에 대한 소외 현상이 있음 (기업 파트너가 적어 연계에도 한계)
- 코넬지역이 대표적임, 주요 산업이 관광만 집중되어 있음. 그래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 서중부지역

은 큰 쇼핑센터가 들어오며 중간기업이 붕괴. 이로 인해 청년이 떠나는 문제가 발생함. 실제 농촌에서 정주는 쉽지 않음

- 런던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있지만, 다른 소외지역은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한 고민도 있음

④	영국과 한국의 자산형성지원제도 현황 및 평가
일 시	10월 9일 (금) 11:00
장 소	Open Univ. Office
참석자	Rajiv Prabhakar 교수(Open Univ.), 이주미, 최준영((KIHASA)

□ 논의 배경

○ 한국 맥락에서 "양극화"는 정치적·사회적 적대보다는 자산 격차와 노동시장 분절을 의미함. 한국 정책결정자들은 자산 및 노동시장 양극화에 점점 더 주목하고 있음.

-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져 한국 청년층은 주식시장을 통해 자산을 늘리려는 경향이 강해짐.

□ 영국 분배 상황

○ 영국에서는 양극화는 정치적 차원에서 의미함. 경제적, 정치적 양극화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 경제적 양극화 세계금융위기 이후 발생한 소득 양극화를 보고 있음. 최근에는 생활물가 증가속에서 양극화를 보고 있음. 영국에서는 소득양극화가 관심이 있음. 영국에서 경제 논의는 '양극화'보다는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생활비 위기로 자산 불평등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음.

- 역사적으로 영국은 자산보다 소득 관련 데이터가 훨씬 탄탄함. 노동력조사(Labour Force Survey)는 오랜 기간 축적되어 온 반면, 부와 자산 조사(Wealth and Assets Survey)는 시작된 지 약 20년밖에 되지 않음.

○ 부동산은 비교적 최근 이슈임. 부동산은 젊은 세대의 구매력 문제임. 정책 디자인에서 정치인이 노력하지만 근거를 위한 자료가 부족한 상황.

- 자산은 부동산, 금융, 연금 등 다양함. 영국 조사에서는 귀중품도 조사 중. 영국 젊은 층은 저축과 부동산 구매를 통해 자산을 축적함. 자산축적시 은행의 역할이 중요함. 자산축적을 위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고 있음. 영국 청년 세대의 주요 금융 논의는 한국처럼 집중적인 주식 투자보다는 은행 계좌를 통한 저축 형성에 있음.

○ 유산과 상속 문제는 영국에서도 문제가 있었음. 부동산 상속이 문제가 된 바 있음. 부모에서 자녀에게로. 세대 간 불평등으로 발전하게 됨

- 해소방안으로는 조세가 좋을 것 같음. 대부분의 나라에서 상속세는 어려운 문제임. 영국 정부는 상속 관련 조세는 비우호적임. 소득 발생시 일정비율을 대출해주고 이를 다시 환수하는 형태의 다른 방식으로 하고자 함

□ 자산형성지원 제도 및 금융기본권 관련 논의

○ 영국에서 은행의 역할은 모든 국민이 계좌를 보유하도록 함. 은행이 개개인이 은행에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임. 계좌를 가질 수 있도록 영국 정부도 지원함. 은행 계좌는 급여·복지급여 수령, 세금 납부에 필수적인, 금융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일종의 "여권(passport)"이자 관문 역할을 함.

- 영국 정부는 국민이 보유한 계좌를 통해 소비와 지출 과정을 파악. 반면 미소지자는 이를 확인하기 어려움, 계좌를 통해 조세 포착등도 포함하고 있음.
- 저소득층이 계좌가 없을 경우, 모두에 계좌를 만드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비임금 근로자도 기본계좌 가입 가능. 혜택과 대출에 있어서 다소 차이는 있음. 미계좌로 인한 편익이 낮음. 2차적 빈곤에 노출 가능
- 계좌가 없는 '비은행권(unbanked)' 계층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 때문이거나, 금융기관이 이들을 수익성 있는 고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함.
- 한국의 은행은 사회적 포용의 관문이라기보다 금리 중심의 이윤 추구 기업에 가깝게 기능함.

○ 영국은 저소득층의 저축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Help to save를 운영하고 있음. 월 최대 50파운드를 4년간 저축할 수 있으며, 저축 실적에 따라 최대 1200파운드의 정부 보너스를 제공함 (정부가 저축액의 50%를 매칭하는 방식).

- 문제는 활성 계좌는 약 30만 개인 반면 참여 가능 대상은 300만 명으로 차이가 있음. 참여자와 계좌수 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주요 문제로 지적됨.
- 모든 국민이 계좌를 열어도 소수만 활용하고 이익을 보는 문제가 있음. 모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난제임. 자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내자고 강조하기도 함.
  - 자동가입 제도를 도입할 경우 계좌 개설률은 높아질 수 있으나, 실제 저축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는 별도의 문제임. 특히 일상 생활비 부담이 큰 경우 자동가입만으로는 실제 저축을 보장하기 어려움.
- 두 번째 문제는 계좌 개설 이후 지속적인 활용 여부도 중요함. 금융교육 부족과 참여 저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저축금액이 지나치게 적으면 자산형성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 반대로 과도한 저축은 현재의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

○ Help to save는 매년 1200파운드가 상한이고 18년 간 저축 가능. 하지만 개인 능력에 따른 저축금액에 차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불평등이 발생하게 됨. 이 문제로 동 제도가 폐지

- 저소득층은 낮은 금액만 저금하게 되어 18년 뒤에 보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됨. 한국에서 자산형성지원제도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정부의 역할이 주요함. 정부가 소유자에게 미리 경각심을 주지 못한 것이 문제임. 계좌에 대해 교육하고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했는데 하지 못한 것이 문제이었음

○ CTF(Child Trust Fund)는 아동의 장기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만 18세까지 적립하고 이후 인출할 수 있도록 설계됨. 다만 가구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추가 저축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자산형성 규모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 동 제도는 2011년 신규 가입이 종료됨. CTF 사례는 보편

적 제도라 하더라도 부유한 가정이 더 많이 저축할 수 있다면 오히려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줌.

- 자산을 '보유'하는 문제(ownership)와 자산 수준의 '격차' 문제(inequality)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음. 모두가 자산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격차는 확대될 수 있음.
- 저소득층은 적은 금액을 저축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자산형성 규모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한국에서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제도를 도입할 경우 정부의 지속적인 안내와 관리가 중요함. CTF의 경우 계좌 개설 이후 지속적인 안내가 부족하여 계좌의 존재를 잊거나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지적됨. 이에 따라 학교 진학, 취업 등 생애주기의 주요 시점에 계좌의 존재와 활용 방법을 안내할 필요가 있음. (이른바 "교육적 계기(teachable moments)" 활용. 예: 첫 취업, 운전면허 취득 시점 등)

○ 자산형성을 보편성 혹은 선별성으로 할 것이냐가 검토 필요. 저소득층에게 더 지원해 주는 하이브리드 방식도 검토 가능. 제도에 따라 특정집단에 지원시 불만이 나올 수 있음. 그래서 보편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봄

- 저소득층을 타켓팅한 제도 운영시 고려 사항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저소득 참여는 별개로 고려했으면 함

○ 정부 정책을 통해 포괄적 금융을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제도 운영과정상 누락, 탈락하는 현상이 있음. 기본권이 유지되는 속에서 다시 돌아오는 대상을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음

○ 한국 정부는 금융기본권을, 이전에 저축이나 대출 상환을 지속하지 못한 시민들이 빈곤에서 회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으로 보고 있음. 저축을 유지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출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됨.

- 대출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는 있으나, 대출은 진정한 안정이 아니라 부채를 만들어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신용 접근성 확대에 그치지 않고 재원 배분을 통해 구조적 필요에 대응해야 함.

○ 개개인이 금융에 대한 책임감이 있음. 정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 중요. 금융기본권을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함. 금융기본권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를 현실화하려면 법적 권리 선언을 넘어 정부의 실질적인 재원 투입이 필요함.

⑤	**영국과 한국의 사교육 등 교육정책 현황 논의**
일 시	10월 9일 (금) 14:00
장 소	LSE Office
참석자	Sonia Exley 교수(LSE), 이주미, 최준영(KIHASA)

○ 한국의 사교육 현상에 대한 의견은? (선별적 교육과 그림자 교육 시장에 대한 한국·영국 비교)

- 현재로 사교육 현상이 사회문제와 과잉 시장으로 인식하는 것에 흥미.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면 상위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상위층의 여가 행위가 증가할 수 있음
- 한국 사교육을 정치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특이점임(한국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반에서 사교육이 정책

문제로 인지되는 점이 흥미로움). 영국은 사교육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교육 과열에 대한 논의는 하고 있지 않음(사교육 활성화를 오히려 장려한다는 점에서 영국이 한국보다 뒤처져 있다고 봄). 저소득층에 지원할수록 상위층이 행동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이른바 래칫 효과(ratchet effect): 하위층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면 상위층이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을 더 늘리는 현상)

- 기초교육이 증가할수록 대학 진학률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사교육비를 더 높이고 시간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확장적임(교육사회학에서 사교육 시간과 비용 증가를 '확장'으로 표현). 또한 질적인 차원에서 보면 위계질서가 발생하고 있음. 일대일 수업이 가능한 부자 계층과 그렇지 못한 하층계급 간 교육 질의 차이가 있다고 봄 (상위층은 1:1 과외, 하위층은 다:다 수업이나 온라인 수업 등으로 질적 격차가 발생)
- 상위층은 질 좋은 고등교육에 접근하거나 좋은 대학에 보내게 되고, 불평등을 확장하게 됨. 추가 자원을 활용해서라도 더 좋은 교육적 시작을 하는 것이 가능하면서 교육불평등을 양상한다는 의미임
- 한국에서는 노동시장 지위가 교육 접근성을 결정하고, 교육이 다시 미래의 부를 좌우하는 순환 구조가 있음. 한국 부모들은 사교육을 삼성 등 대기업 취업과 중소기업 취업의 갈림길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다른 점은 영국은 사교육 산업에 대한 제재가 없음. 교사에게 오히려 사교육 제공을 허락하고, 동기부여가 되고 있음. 잉글랜드는 선생님이 낮은 급여로 인해 별도 사교육을 통해 부족한 월급을 충당하기도 함(자기 학생에게 과외를 하는 것도 허용·권장됨. 반면 한국은 수업 소홀을 막기 위해 공립학교 교사의 과외를 금지하고 있음)

- National Charity(국가 튜터링 프로그램)은 아시아 사례를 참조하여 만든 것(코로나 이후 학업이 부족한 학생을 위해 도입)으로, 세 가지 목적으로 운영. 첫째는 코로나 시기 학교 교육을 놓치거나 처진 학생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둘째는 사교육시장이 확장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셋째는 동 프로그램을 통해 사교육이 일반 산업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학습 회복 지원보다 튜터링 산업을 정착·정상화하도록 설계되었다는 비판)

○ 영국은 사교육을 문제로 인지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논의 되고 있지 못함(한국만큼 논의의 깊이가 깊지 않음).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인지하지만 영국에서는 다루어지고 있지 못함

- 교육지출의 인플레이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대학 이후 석박사 과정이 증가하고 있는 이는 노동시장 축소영향으로 보임(교육 인플레이션: 줄어드는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 점점 더 높은 학위가 요구됨)
- 영국 부모도 자녀가 좋은 일자리를 얻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 생활에서도 석박사 과정에서도 더 나은 시작점을 위해 자산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양국 모두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부모들이 더 나은 진로를 위해 명문대 진학에 막대하게 투자하는 경향이 있음

○ 영국 NTF는 효과는 정확하지 않음. 효과는 적고 예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 NTF는 영향이 적음

- 공교육이 사교육 문제를 일부 해소하지만, 한국적 경험에서 인터뷰 시 EBS 등의 강화를 강조하며 공교육 중요성 주장. 하지만 일부 정치인은 이러한 지원이 결국 경쟁력을 낮추고 부족한 부문을 결국

사교육으로 이으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임 (방과후학교나 EBS 같은 공교육 강화로는 경쟁 심리를 해소할 수 없어 사교육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봄)

○ 우선 영국의 교육 관련 문제는 학위가 가진 가치가 감소함. 학위가 가진 성공의 의미가 줄어들고 있음. 둘째는 정부 예산 긴축으로 학교 예산이 감소하고 있음. 이직 선생이 증가하고 팬데믹 이후 학교가 직면한 문제가 더 증가하고 있음

- 학교문제를 인식하며 부모는 자녀의 사교육에 시선을 돌리고 있음. 예를 들어 초등학생을 민간사립학교로 보내기도 함.
- 또한 고등교육으로 가는 것도 제한적임. 교육수준이 단순 대학 진학을 하기에는 학비가 부담됨(잉글랜드 학부 등록금 연간 약 9,000파운드). 특히 노동자 계층이 어려움이 큼. 이들은 자녀 학비를 조달하기가 어렵고 대출로 충당하기도 함. 하지만 이자가 높아서 대학졸업이후 자녀가 취업해도 대출상환으로 삶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일부 노동계급 출신 졸업생은 5만~6만 파운드의 부채를 안고 졸업하며, 이로 인해 주택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음)
- 고등기술직업 교육도 예산이 감소함. 이로 인해 직업훈련 교육도 감소하고 있으며, 교육이 취업으로 이어지는 것도 제한적임.
- 추가적 문제로 학자금 대출 문제가 크며, 정부 긴축재정으로 인한 대학 재정의 어려움이 있음. 공공펀딩 축소 등으로 인한 학생 등록금의 대학재정 의존이 증가 중(대학이 생존을 위해 등록금에 지나치게 의존). → 악순환 발생. 스코틀랜드에서는 재원 축소로 특정 학과의 교수가 실직하기도 함

○ (한국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의 교육비·향후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할 예정인 자산형성 제도에 대해) 자산형성이 일부 도움되지만(하위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틀림없음), 자산 형성속도가 물가상승, 외부 영향의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가 등이 중요(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이며 학비에 충분한지가 관건). 이외에 프로그램 참여자가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활용과 관련되어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음(참여자가 투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금융이해력 교육을 병행해야 함)

- 자산형성으로 인해 생각해 볼 물제는 물가상승, 소비 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봐야 함. 인플레이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 정책도입이 중요한데, 일정 부문 사교육시장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상한을 두는 것도 고려. 국립대학은 등록금이 적어 의미가 있지만, 자산형성이 확대되면 등록금이 가지는 가치가 변화될 수 있음(교육비에 대한 가격 규제가 없으면 개인 자산 증가가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
- 이 외에 학생에 따라서는 만약 좋은 기업 가기 위해 좋은 대학을 가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즉, 못가게 되면 외국으로 유학할 경우 정부가 지원한 자산형성 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임.
- 자산형성이 중요하지만 수요자가 주어진 자산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고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사용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봄

○ 영국에서도 개천에서 용난다는 의미가 줄어들고 있음. 노동시장 변화, 좋은 일자리 기회가 줄어들면서 학위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으면, 이는 전환기로 볼 수 있음(교육이 여전히 상향 이동의 수단인지, 기존 계급 구조를 강화하는 수단인지에 대한 논의)

- 대학 자체도 좋은 대학에 진학해야만 계층이동이 가능할 것임. 낮은 대학에 입학시 오히려 대출금이 증가하는 문제도 있음

○ lone depay에서는 미취업시 학생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고, 저소득층 자녀 학생에게는 보조금이 지원 중. 대출금을 할인하거나 중등교육과정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게 대학입학 기회를 부여하기도 함

- 저소득 자녀는 대출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지만 상환조건은 동일함.

○ 정규교육에서 탈락한 대상자의 재진입은 허락되지만 별도의 지원은 없음. 개개인이 스스로 비용을 지불해야 함. 일부는 민간단체 등이 역할이 있을 수 있음. 정부도 역할하지만 individual loan을 두고 교육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기는 함

- 평생교육은 언제 진입하느냐에 따라 영향이 큼. loan이 주어지지만 결국 지원은 아님. 고등교육에 크레딧을 사용하기도 함 고등교육 진학시 일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영국 3-4년 기간 한정으로 funding of life의 loan을 이용할 수 있음. 특정기간에 특정금액에 접근할 수 있음. 돌아오면 별도 지원금은 없음.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함

○ 킥스타트(Kickstart) 같은 제도가 전후 80여년간 유사한 프로그램이 다소 존재(청년보장(Youth Guarantee) 등). 이들 제도가 모두 단기적이고 예산도 많지 않았음. 정부 우선순위에도 없는 제도임

- 직업교육 보다는 영국은 고등교육에 우선을 두고 있음. 수요 보다는 이동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주요한 제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직업교육과 직업이동은 개인의 문제이기에 그 중요성이 높지 않음(직업훈련은 학업 경로에 비해 위상이 낮고 재정도 부족)
- 맥락적으로 보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함. 높은 지위를 원하면 고등교육을 받게 됨. 소외계층이 직업훈련에 집중. 1960년대는 복지국가로 중요성이 낮았지만 지금은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상대적으로 직업훈련의 중요성은 낮아지게 됨

○ 한국의 자사고 같은 형태로 영국에도 그래머스쿨 제도가 있음. 그래머스쿨은 정답이 아님. 저소득층의 참여 비율은 매우 낮음.

-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여기에 사교육이 영향을 미침. 특히 부모소득이 크게 영향. 저소득층이 진학해도 활동에 대한 비용이 증가함으로 불평등 완화는 없다고 판단. 또한 비그래머 학교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좋은 학생이 여기에 모이다 보면 비그래머스콜 진학 학생의 학습력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음

○ 교육기본권, 학습받을 권리에 대한 의견

- 교육 기본권적 접근에 동의하며, 고등학교의 경우 공립, 사립학교 학비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의미 있는 정책임. 초중고 교육 정책은 유니버셜 하게 하는 것이 가능. 하지만 고등교육은 차이가 있음. 학자금 대출의 문제가 있어 기본권은 다르게 접근해야 함
- 보충교육이 중요하다고 봄. 부가적 교육지원이 제공될 때, 평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정됨. 영국에서는 보호아동 청년 규모에 따라 펀딩이 제공되고 있음(학생 프리미엄(Pupil Premium) 등 보상교육). 통합적 지원도 있지만 부가적 지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재정이 충분히 투입된 보편적 기본선 위에 보상적 지원을 더하는 사회민주주의 모델 지지). 결국 제도 도입시 부자계층의 반응이 중요함. 여전히 사교육이 강조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음. 기본권으로 해도 부자층의

반응이 중요

- 노동시장 불평등을 해소해야 함. 교육이 유일하게 이를 해소할 수 있음. 교육불평등이 노동의 불평등을 유발하며, 노동시장 불평등은 교육 불평등 해소만으로는 해소되지 않음. 여러 불평등 문제를 함께 해소하는데 것이 중요함(진정한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교육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노동시장 내부의 불평등을 직접 다뤄야 함)

3 출장 증빙

10월 6일(화) Local Trust	**10월 7일(수)** LSE / NEF / KCL
	
10월 8일(목) Foyer / KCL	**10월 9일(금)** Open Univ. / LSE
	
	